

第289回國會 (臨時會) **일자리만들기特別委員會會議錄** 第 4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0年4月6日(火)
場 所 企劃財政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업무현황보고
 - 가. 법무부
 - 나. 문화체육관광부
 - 다. 환경부
 - 라. 방송통신위원회
 - 마. 공정거래위원회
 - 바. 금융위원회

審査된案件

- 1. 업무현황보고 1
 - 가. 법무부
 - 나. 문화체육관광부
 - 다. 환경부
 - 라. 방송통신위원회
 - 마. 공정거래위원회
 - 바. 금융위원회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변재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4차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

- 가. 법무부
- 나. 문화체육관광부
- 다. 환경부
- 라. 방송통신위원회
- 마. 공정거래위원회
- 바. 금융위원회

○위원장 **변재일**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우리 특위는 지난 3월 말 두 차례에 걸쳐서 총 13개 부처로부터 고용 관련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기관 이외에 국가고용전략회의에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부처들로부터 계속 고용 관련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13개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대책, 그것이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용 문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나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처하고 사회부처 간에도 어떠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서의 정부의 견해, 또 경제정책을 보는 시각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일자리 관련, 고용 관련 관계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각 부처가 추진하

고자 하는 사항, 또는 여러 경제단체가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 고용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정책적인 해결, 이행 실태를 각 상임위원 국정감사 기간 중에, 금년 국정감사 기간에 확인토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각 위원회로다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특히 그중에서도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법 제도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우리 특위에서 먼저 논의하고 특위에서 합의된 사항은 각 당 간의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 후에 국회 각 상임위원별로 신속하게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가 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각 부처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운영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해당 부처로부터 일자리 창출 관련 보고를 순차적으로 듣고 위원님들 질의는 일괄적으로 통합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해 주시고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법무부장관입니다.

고용 문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무부의 2010년 일자리 만들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창업 절차 간소화 등 법제 개선과 출소 예정자 취업박람회 개최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출소자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재경입니다.

범죄예방정책국장 주철현입니다.

교정본부장 이태희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재경**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법무부의 2010년 일자리 만들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진 현황, 추진 계획의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제 개선입니다.

2009년 4월 소규모 회사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상법, 상업등기법, 공증인법을 개정하였고 2009년 1월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법률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둘째, 수형자·소년원생 등 직업훈련 실시입니다.

전국 27개 교정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청송직업훈련교도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전문 직업훈련소로 지정·훈련 중입니다.

소년원생의 직업훈련을 다양화하기 위해 2009년 1월 교육 수요와 구직 환경 등을 반영하여 직업훈련 과정을 개편하였고 금년 2월부터 노동부와 연계한 직업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출소자의 취업·창업 지원을 위해 2008년 4월부터 전국 교정시설에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2009년 10월 천안 개방교도소에서 제1회 출소 예정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2008년 6월부터 1사 1출소자 고용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에는 미소금융재단 등과 연계하여 출소자에게 무담보로 창업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소년보호위원 등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취업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기업에서 소년원 출신생을 채용하였습니다.

넷째, 사회 통합 프로그램 전문 강사 양성·채

용입니다.

결혼이민자 대상 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전문 강사 양성으로 고용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금년 1월에는 20개 ABT 대학에서 양성한 전문 강사 등 368명을 전국 76개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인턴은 현재 9개 분야 208명을 채용하여 근무 중인데 결혼이민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집중 단속하여 국민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의 생계형 일자리 보호를 위해 국민 일자리 잠식이 심한 음식·숙박업 분야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근절을 위해 노동부, 경찰청, 중소기업청 등과 연 2회 합동 준법제도 및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국민 고용 창출을 위해 외국인 영주권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10인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가 등에게 영주 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5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 현장 방문상담, 해외 진출 기업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년원생 등에 대한 기술 교육, 교도소 방문 직업훈련 및 설명회 개최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출소자 등의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창업 아이템 보유 출소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무담보 소액 창업자금 저리 대출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시행하고 제2회 출소 예정자 취업박람회를 전국 규모로 동시에 개최하겠습니다.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수형자 종합 일자리 정보망을 운영하여 기업체가 등록한 구인정보를 활용, 출소 예정자의 취업을 상시 연계·알선하고 여성출소자 지원을 위해 여성지원센터를 개관하며 출소자 후원의 날 행사도 금년 9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발굴하여 소년원생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신기술 현장 체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전문성 향상 및 운영기관 확대를 위해 사회 통합 프로그램 강사를 추가 양성하고 운영기관 지정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 소개와 함께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부의 2010년도 일자리 창출 대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도 고용 문제가 전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2010년도 문화일자리 창출 방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우선 문화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여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높이면서 문화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년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미래 취업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금용자 지원과 또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민간 분야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장이 원하는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박람회, 인력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일자리 중개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부 내의 일자리 창출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여 일자리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입니다.

이우성 정책기획관입니다.

박광무 문화예술국장입니다.

박순태 예술정책관입니다.

방선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입니다.

김기홍 체육국장입니다.

김갑수 미디어정책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며, 오늘 주시는 의견들을 깊이 새겨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보고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곽영진**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곽영진입니다.

2010년도 저희 부 문화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용 여건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용 여건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여가문화 확산 등에 기여하는 측면은 크지만 직종별 특성상 민간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두 번째, 콘텐츠 산업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서 고용 창출이 많고 진입장벽이 낮아서 창업이 용이하지만 최근에 콘텐츠 산업의 고용 효과가 정체되고 있고 관련 전공자들이 현장의 요구에 부합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분야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이지만 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고용이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여행업이나 유원시설업 등에서는 좀 정체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관광인력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일자리 창출 여력은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09년도에 문화 분야에서 일자리는 1만 6847명을 창출했는데 이는 자체 예산을 절감하거나 우리 공공기관의 봉급 반납 이런 재원들을 활용해서 추진을 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일자리 창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투입을 통해서 일자리를 추가 창출해 나가려고 합니다. 스포츠도토적립금과 문화부 소속 26개 공공기관의 절감 재원을 토대로 해서 1700여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 용자와 같은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 민간에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세 번째로 시장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과 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서 문화일자리 중개와 지원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 중에 첫 번째,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하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소외지역 국공립 유치원 500여 개소에 예술강사 250명을 이번에 새로 지원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 학교와 노인, 장애인, 교정시설 등 소외지역에 기존의 예술강사파견사업을 확대해서 금년도에 500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도서관에 순회사서나 그다음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인력 그리고 사회복지관이나 도서관 등에 미디어교육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국민 독서진흥기반 조성 일자리 315개를 창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박물관과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기관의 야간 운영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 인력 838명을 추가 채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문예회관 그리고 사립 박물관·미술관 또 민간 공연장에 문화예술교육 인력 그리고 전문 학예인력들을 선별 지원해서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면서 고용 효과를 누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강사 배치도 360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1300여 명과 장애인 체육활동 보조인력 80여 명 그리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 축구 리그 지원 인력 5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술가와 소외지역을 연결하는 예술

공감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를 600여 개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술가와 기획자들을 활용해서 소외계층의 생활공간을 공공미술로 개선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고, 우수한 공연단체를 선발해서 소외지역의 초·중·고교생에게 수준 높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 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재의 보호 일자리 지원입니다.

궁능 야간 개방하는 경우나 목조문화재 상시 감시 등을 위해서 취약계층 또는 지역 유희인력들을 활용해서 문화재 일자리 1152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봉사형 일자리를 저희가 확산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040명 정도를 고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의 향토사학자나 주부 등을 활용해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용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서 책 읽어주기 사업에 80여 명을 고용하고 있고 또 약수터나 공원 등 우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현장에 생활체육지도자 520명을 배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공 분야 활용 경험을 갖도록 해서 청년 인턴을 2008명 채용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문화예술 분야는 국립 문화예술기관의 연수단원으로 그리고 박물관 같은 경우에 미정리 유물 등록……

○위원장 변재일 간략하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박영진 예.

그리고 관광 분야, 체육 등 분야에 있어서 2008명을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차세대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면서 창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콘텐츠의 디지털화, DB 구축 등 콘텐츠 기반조성 사업에 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융합형 콘텐츠 지원을 통해서 차세대 콘텐츠 분야 일자리 창출 요원들을 1010명 정도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콘텐츠 분야의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서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는 일자리 80명을 포함해서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450명 등 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통한 창조적인 일자리도 3430명을 창출

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 지원과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실제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금융 지원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은 관광진흥기금에서 2300억 원을 융자해서 1400여 명의 민간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기능형 관광단지 개발을 허용한다든가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휴양콘도미니엄 회원 모집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 투자 촉진과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문화일자리 중개 기능을 강화해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시장맞춤형 전문 인력 4400명 정도를 양성해서 CG나 3D 입체영상 컨버팅 인력, 방송영상콘텐츠 인력, 다문화 강사 인력들을 양성해서 지원하고자 하고 있고, 또한 해외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경력 개발이나 취업 역량을 강화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콘텐츠나 관광, 체육 분야 등 채용박람회 그리고 인력정보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저희 부에 한눈에 문화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준비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문화부 내부에 문화일자리 TF를 3월부터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으며, 이 TF를 통해서 지역별로 또 현장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연결시키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는 업무보고 시에 18개 사업에 1만 5177명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목표를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요. 3월 말 현재로 1만 3058명을 채용했고 현재 목표 대비 86%를 달성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 소개와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존경하는 변재일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는 2009년도에 환경 SOC 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 단기 일자리 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 네 가지 분야에서 44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총 4만 855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SOC 사업 예산 증가와 단기 일자리 사업의 성과에 기인한 바가 큼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사업이 재정 투자에 의존하면서 단기·한시적 일자리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부터는 이러한 지적을 수용해서 시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일자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환경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생태관광, 환경보건, 기상산업, 온실가스 분야가 바로 그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들 분야는 아직 시장형성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환경서비스 산업이 빠른 시간 내에 고용 창출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시장 기반을 형성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경제 위기로 인한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 분야에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업체, 시민단체 등을 지원해서 재활용, 녹색구매, 환경교육 등 환경 전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용 문제 해결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래 환경 분야 핵심 산업을 전망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산업 부문과 고용시장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취업 알선 등 구직자와 기업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에서 기업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진입 장벽을 허물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며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해 오던 사업들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정보·기술·자금을 지원해서 기업 스스로 고용 창출의 여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환경부가 앞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지체 없이 개선·보완할 것이며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대안 또한 충실하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를 드리기엔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환경부의 간부와 기상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지태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정연만 자연보전국장입니다.

백규석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윤종수 기후대기정책관입니다.

안문수 상하수도정책관입니다.

이정섭 녹색환경정책관입니다.

오종극 환경보건정책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희구 기상산업정보화국장 직무대리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우리 장관님들 국무회의 가야 될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기획조정실장 홍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홍준석입니다.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자리 현황과 문제점, 추진 방향, 추진 내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 분야 일자리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다.

환경부문의 총 종사자 수는 2008년 기준으로 18만 5000여 명으로 국가 전체 취업자 대비 0.78%, 매출액은 전체 GDP의 3.2% 수준입니다.

산업분류별 매출액은 도소매업과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산업 기술에 필요한 전문지식·경험을 가진 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 관련 학과 졸업생 수는 감소하는 등으로 향후 양질의 환경전문 인력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고용 여건 악화로 환경 분야에서도 일자리의 안정성이 약화돼서 임시직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자리 창출 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환경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사회적 기업 유망 분야 발굴·육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 합니다.

셋째로 미래 핵심 산업을 선도할 양질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산업 현장에서의 인력 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민간부문의 진출·참여 분야를 확대하고 R&D 투자 확대를 통해서 기업에 필요한 기술·지식·정보·재정 등 지원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분야별 일자리 창출 추진 대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태관광 분야에서는 문화부와 공동으로 10대 모델 사업지를 선정해서 생물자원관, 에코빌리지(Eco-Village), 에코랏지(Eco-lodge)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면서 산, 습지, DMZ, 갯벌, 농촌 등의 특성을 살린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상품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태자원의 보전·복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제, 자연환경 해설사 제도 등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상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차세대 지역수치모델 또는 GIS 활용 국지기후 영향 평가 기술 등 4개의 기상청 고유 브랜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기상산업 R&D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R&D 지원을 확대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상정보 거래 활성화와 기상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제도정비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아토피, 천식 등 환경질환 진단·치유, 환경보건교육,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아토피프리 에코에듀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주요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의무화 또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가정 내 환경성 질환 유발요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컨설팅을 제공하는 친환경 건강도우미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온실가스 검증 분야에 있어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에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검·인정 체계가 구축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 검증기관이 지정되고 또 검증 전문가 약 1000여명 정도가 2013년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회적 기업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년 1월 기준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총 291개 기업 중에서 재활용·청소 등 환경분야에서 52개의 사회적 기업이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정책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기업 현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법인 등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적 기업 발굴 유망 분야는 지자체 재활용 센터 그다음에 둘째로 지자체 공공선별장 다음 7페이지의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그다음에 농촌 폐비닐 수거·처리 또 환경보건 분야 또는 녹색구매 분야, 환경교육 분야, 수변구역 관리 및 수질보전활동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미래 환경 분야 대응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와 분야별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11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또는 독성·위해성 평가, 토양지하수 관리, 폐기물에너지화 분야 등의 전문인력을 양

성하고 지식기반 환경 서비스 전문 석·박사급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에코 디자인 분야의 인력 양성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물 부족, 음용수 확보 문제 해결과 급성장하는 세계 물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핵심 인력 양성과 국제환경 규제 대응 인력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체 인력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서 인재개발협의회를 운영한다든지 산학 연계형 취업지원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 부문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일반 민간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제거를 해서 민간업체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한 분야는 토양환경평가, 토양위해성평가 또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립공원 청소 업무나 영농폐기물 수거 업무 같은 업무는 민간 위탁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염감시·정보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유해물질 관리 분야에서는 전문 분야에서 민간 인력의 참여 범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지원 확대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서 환경산업 육성 융자금과 녹색펀드를 통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R&D 투자를 확대해서 미래 환경산업을 견인할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개발된 환경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앙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등 환경산업 성장 유망국가들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환경산업 진출 지원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입니다.

부 내에 고용전략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일자리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적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4월 중에 노동부와 사회적 기업의 체계적 발굴·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을 하고 사회적 기업 대표, 산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 소개와 현황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존경하는 변재일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동전화·인터넷·디지털방송 등 방송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첨단 정보통신기기 등 청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유관 산업의 수요를 창출하여 고용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보다 나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전파자원 총 조사 추진 등의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신규 할당,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미디어-콘텐츠 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서 방송통신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과 고용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저희 위원회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다음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입니다.

그다음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입니다.

그다음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기주 방송통신 위원회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방송통신 분야 일자리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방송통신 분야 일자리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30만 3000명으로서 국내 총 취업 인구의 약 1.3%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방송 서비스 분야 종사자 수는 약 3만 명 수준이고 통신 서비스 분야는 10만 명 수준입니다.

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기기의 경우에는 약 17만 정도의 고용이 유지되는 수준입니다.

2페이지 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송통신 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 기업 간 인수·합병 및 경영효율화 추진 등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규제 완화로 기업의 자율성 제고, 신규 서비스 도입,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커지고 고용이 늘어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속적인 규제완화, 신규 서비스 활성화, 시장경쟁 촉진 등에 주력해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재정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에서 먼저 전파자원 총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하고 국내 전파자원의 생산적 활용기반 조성을 위해서 3개년 사업으로 국내 전파자원에 대한 총 조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무선국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전파환경 측정, 전파환경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 그 주된 사업이고 총 173억 원을 투입해서 106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방송통신 인력양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방송의 디지털 전환, 통신망의 고도화, 방송통신 융합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방송통신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서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에 4개 학과를 운영해서 연간 256명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영상 전문교육 지원을 위해서 현업 방송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금년부터 3개년 동안 2100명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또 디지털방송 기술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2010년부터 12년까지 방송기술 분야 종사자 39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금년에는 61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세 번째로 방송통신 분야 민간 투자 촉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신규로 할당을 하겠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 800MHz 대역 및 900MHz 대역의 우량 주파수를 회수해서 후발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재배치하고 신규 설비투자 유도과 3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2.1GHz 대역 잔여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고자 합니다.

이달 중에 주파수 할당 심사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앞으로 이동통신 3개 사업자는 향후 5년 동안 3조 7000억을 네트워크 쪽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 기반의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해서 시청자에게 우수한 화질, 데이터·양방향 서비스 등 고품격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콘텐츠·가전산업 등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9년부터 13년까지 총 5년 동안 총 2조 9000억이 소요되며 이 중에서 정부가 1조 300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송수신 환경 개선을 위해서 방송사에 대한 용자 지원, 관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또 전국적으로 3개 군 지역에 대해서 아날로그 방송을 시범 종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청자지원센터 운영 및 저소득층에 대한 디지털TV 구매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무선 인터넷 활성화로 증가하는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이용 수요를 충족시키고 서비스 사업자 및 관련 장비업체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통신 사

업자들의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와이브로 투자를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총 4700억 원을 투자해서 전국 84개 지역과 주요 고속도로에 와이브로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일반인의 이동이 빈번한 공공장소에 무선랜 핫존을 구축하고 일반 가정용 무선랜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미디어-콘텐츠 기업 간 상생협력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에 대응해서 우리나라 모바일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국산 콘텐츠가 개발·유통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중소 콘텐츠 사업자 및 1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모바일 콘텐츠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SKT·KT·LGT가 각각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개발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등록·판매 등의 교육도 아울러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 소개와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쟁정책 추진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규제개혁,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경쟁촉진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정위는 신규 창업 및 사업 확장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 활동 및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법령 등의 제·개정 시 공정위와의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운용을 강화하여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하도급 거래나 가맹 사업 및 유통 분야 등에서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철저히 감시·제재해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대상을 공기업·유통 등의 분야로 확대하고 상생협력 지원 효과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쟁 촉진을 통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과점 사업자 등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신규진입 등을 방해하는 경쟁제한행위를 적극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정위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저희들 정책 추진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인옥 부위원장입니다.

박상용 사무처장입니다.

김순중 기획조정관입니다.

지철호 경쟁정책국장입니다.

안영호 시장감시국장입니다.

김상준 기업협력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자리 창출과 경쟁 정책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주요 중점 추진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쟁 정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 정책은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조장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진입규제 등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 친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독점적 지위 남용 등 개별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고 있습

니다.

공정위는 규제 개혁, 중소기업 경영 여건 개선,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 활동 및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여 신규 창업 및 사업 확장 투자를 촉진하고, 하도급, 가맹 사업, 유통 분야 등에서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며, 독과점 사업자 등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신규진입을 방해하는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경쟁 촉진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쟁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여 기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국민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각 분야에서 일자리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 중점 추진 시책을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중점 시책 중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주회사 규제 완화 과제입니다.

추진 배경은 99년 이후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여 출자 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핵심적인 규율 장치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을 현재 10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 부문의 규모가 큰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화하여 금융사 부실이 지주회사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주회사 규제 완화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살펴보면, 지주회사로 전환 시 경영권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자금을 신규 사업 투자로 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증손회사를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 조직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게 되어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0년 3월 18일 여야 합의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고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진입규제 제거·완화 과제입니다.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진입규제가 개선되면 신규 창업이 활성화되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09년 1단계로 공적 독점 영역을 축소하고 민간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분야 등 26개 과제를 개선하였고, 2010년 2단계로 보건·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 국민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경쟁제한적 규제 신설 방지 및 개선 과제입니다.

진입 및 영업 활동 제한 등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63조상 법령 제·개정 시 사전 협의 및 경쟁영향평가를 통해 경쟁제한적 규제 도입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09년에는 총리실의 규제위 심의에 앞서 공정위의 경쟁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앞으로 각 부처의 경쟁제한적 규제 신설에 대한 검토를 강화해 나가고, 다음으로 경쟁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에는 금융, 통신, 운송 등 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분야를 중심으로 법령 제·개정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촉진 과제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전통적으로 '갑을' 관계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여전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애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엄정한 하도급법 집행과 함께 하도급 거래 문화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도급법 집행 강화를 위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구두 발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적극 활용하

며, 범 집행 효과가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미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협약을 공기업, 유통 등의 분야로 계속 확대하고 그 효과가 2차 협력사까지 확산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협약 이행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평가에 반영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및 가맹점 사업자의 보호 과제입니다.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중소 납품·입점 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법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납품단가 인하 강요,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 등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맹점 사업자의 보호에 관해 말씀드리면, 퇴직자들의 주요 창업 분야인 가맹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가맹거래 질서가 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 본부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가맹 사업 희망자의 창업을 촉진하도록 가맹 사업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고 가맹금을 먼저 수령하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부당한 공급 중단, 판촉비 부담 전가, 가맹금 미반환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조사·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점력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 시정 과제입니다.

경쟁제한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새로운 사업자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즉 독과점 사업자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경쟁제한적 행위를 할 경우 경쟁사업자 배제로 인한 피해 효과가 크고, 리베이트 등 불공정한 영업이 관행화되어 있는 일부 업종의 경우 제품 개발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게 되고,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

기 등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진입하지 못하거나 퇴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여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제한행위를 지속적으로 시정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거래의 기준이 되는 모범관행을 보급함으로써 기업들 스스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 소개와 현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존경하는 변재일 일자리만들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무엇보다도 금융이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다함으로써 실물경제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창업과 운영 및 설비투자를 위한 기업자금 조달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융공기업을 통하여 기업의 설비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한편, 우량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성장을 위한 기업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량기업의 상장과 유가증권 발행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동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잠재력도 제고해 나가자 합니다.

둘째, 금융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기반을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금융 부문에서의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해서 금융회사들의 영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IT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적극 유도하여 금융 부문 내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취업을 앞둔 청년층에게 폭넓은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 실업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창업 등을 통한 저소득·서민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년 말부터 시작한 미소금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민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김주현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책 질의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정책 제언과 고견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위원회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현 사무처장입니다.

정지원 기획조정관입니다.

추경호 금융정책국장입니다.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에서 금융위원회 일반 현황, 그리고 2010년도 금융위원회 중점 정책 추진 과제는 보고를 생략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첫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금융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공기업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적정 수준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국책은행을 통해서 총 41.1조 원을 공급하고 보증기관을 통해 52.6조 원의 보증을 공급하겠습니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정책 금융공사는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편입될 경우에도 기존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보증기관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편입 시 발생하는 보증 감축, 가산보증료 부과 등의 비용 부담을 일정 기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습니다.

금융공기업의 대출 또는 보증심사 시에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 및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공기업의 특별자금, 특례보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각 금융공기업별로 구직자·구인기업 연계, 창업기업 발굴 등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량기업 상장 활성화를 통한 기업투자자금 조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성장동력기업이 기술력 등에 기초하여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장 요건 등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상장 우량기업이 상장을 통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이 사업실질이 없는 명목회사인 점을 감안하여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소·중견기업 투자펀드 등 자금 공급 수단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채권 발행 등 직접금융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원활히 조달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재무

안정 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하도록 발행주체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자산유동화 제도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녹색기업 성장을 위한 녹색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녹색예금·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및 녹색기업인증제를 토대로 녹색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고, 이 밖에 녹색산업 주가지수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이용한 투자자금이 녹색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아직 성장 초기 단계이지만 장기투자가 필요해서 민간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녹색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지원 방식은 금리 우대, 보증료 인하 및 보증한도 확대 등이고 지원 목표는 2009년도 총 4.3조 원에서 2010년도에는 총 6조 원 규모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금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 영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융 부문의 경우 09년 중 경기위축,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되었으나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금융 부문 고용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중에는 금융 및 보험업의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3만 명 증가하여 89년 9월 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인프라 투자 지원 등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발전 및 고용창출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인턴 채용으로 청년층 실업 해소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들은 2009년 중 1만 235명의 인턴을 채용하여 당초 계획 대비 151.8%를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권 청년인턴 확대 및 우수 인턴사원에 대한 정규직원 채용 기회 확대 등을 통하여 금융산업 자체의 고용창출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각 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내용의 인턴십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미소금융사업을 통한 저소득층의 창업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저소득 서민층의 창업을 통한 경제적 자활을 돕기 위하여 미소금융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휴면예금과 민간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저소득 서민층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대출하고 대출과 병행해서 경영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점 설립은 2010년 3월 31일까지 34개가 설립되었고, 지원실적은 2010년 3월 31일까지 648명에 대해 총 4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 5690명에 대해 대출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소금융 지점 확대, 대출한도 상향 등에 따라 대출실적이 증가하는 등 조만간에 본제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운영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점 확대, 홍보 활동 등을 통해 미소금융의 접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방금 보고한 3개 부처와 3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시에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장관님들하고 위원장님들께서 빨리 자리를 떠나야 될 상황입니다. 떠난 다음에는 차관님들께서 계속 앉아서 질의답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 7분은 꼭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도 3개 부처, 3개 위원회의 보고를 받으면서 어딘가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일부 있습니다. 성장을 하면 고용은 해결된다, 고용은 성장의 어떤 종속변수인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경제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국가경쟁력 강화라든지 효율성 제고,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고용과 직접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 규제 완화가 고용에는 역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고용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정 운영의 가장 큰 기조를 고용 확대에 두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고,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모두 이제는 우리 경제가 풀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고용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을 모든 정책 판단의 가장 우선순위에 뒤야 되겠다 이런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하자는 말까지 있을 정도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고용 문제의 해결 없이는 우리 해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다, 고용 문제의 해결 없이는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을 인식하시고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희 위원** 배은희 위원입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보고서 6쪽에 보면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공기기업의 대출이나 보증심사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기업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지, 특히 중소기업은 고용인원이 20~30인 이내인 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고용창출 효과가 한 10% 정도 더 고용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지 그런 어떤 기준 같은 것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지금 저희가 KDI에 연구용역을 썼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줘서 아마 6월 달쯤 나오는데요, 그런 금융과 고용과의 관계, 고용창출 효과 큰 기업이…… 어떤 정도 영향분석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들이 보기에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하고 보증심사 할 때 우대를 하는데……

○**배은희 위원** 아직 가이드라인을 많이 고민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이게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더 부추길 수가 있거든요. 상황이 좋아서 인원을 더 고용하는 기업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자꾸 더 쉽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20~30인 이내의 인원을 갖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이라는 것도 감안해서 이 기준을 만들 때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잡 미스매치(Job Mismatch) 문제가 항상 문제인 거잖아요, 중소기업은 자리를 만들어 놔도 거기에 일할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찾아오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대기업에 있는 사람하고 차별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금융위원회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실 수 있을지, 그런 곳하고 차별하지 마라……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와서 일하면 그만큼 뭔가 좀 장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디 가면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받는 대접이 시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자꾸 안 가는 것 같아요.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시정하시는 그런 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보증제도를 통해서 더 보안을 해 주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배은희 위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것을 잘 좀 지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소금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적이—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액수도 계획 대비 0.3%밖에 진행이 안 됐고, 또 대출 방문자도 1만 4700명 정도가 방문했는데 대출은 300명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물론 대출 초기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대출기준을 좀 타이트하게 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심사하는

데 이게 한 3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이게 처음 오시면 저희가 상담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대출 적격자로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게 되고 현장심사도 하고, 3개월 걸리니까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3월 지나고 4월 이후부터는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3개월 걸리는 이유가 혹시 지점이 부족하다거나 상담하는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34개 지점인데 상반기까지 지방에만 한 20개를 또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획기적으로 좀 늘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신용등급을 한 7등급 이상으로, 그러니까 더 안 좋은 사람으로 제한을 해서 이게 혹시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나지 않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지금 7등급 이하만 해도 한 85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

○**배은희 위원** 그런데 거기서 고르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고,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것 보면 6등급까지도 대상자로 넣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6등급 대상자는 은행에 가서 사실 실질적으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6등급인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만 지원해 주면 자립 같은 것을 훨씬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저희가 7등급만 해도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저희가 우선……

○**배은희 위원** 3개월 걸린다고 하셨으니까 4월부터 5월까지 미소금융 실적을 한번 보고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이 제가 보는 것이랑 부위원장님 보시는 것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조한 이유가.

그리고 시간을 지키라고 하니까……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미소금융 관련해서……

출소자 창업 지원하는 것을 미소금융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신다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이 지금 선정된 사람이 열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배은희 위원** 너무 적은 수 아닌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지금 14억 원을 받아 가지고 3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아마……

○**배은희 위원** 일인당 한 5000~6000 정도 되는데……

○**법무부장관 이귀남** 최대가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배은희 위원** 평가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금년에는 지금 40억을 신청해 왔습니다. 아마 4월 중에 배당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 많이 배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어떻게 잘 협의가 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범죄를 없애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줄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창업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분간 지원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민주당 광주 북구을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팔당 유기농단지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김재균 위원** 직접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김재균 위원** 이 단지는 국내 최대의 유기농단지예요. 그래서 오는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유치를 확정짓기도 했지요? 그런데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이 지역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 이렇게 되

어 있어요.

경기도에서 이 사업으로 관람객 10만 명 유치, 522억 원의 경제적 수익을 기대하면서 현재 1300ha인 유기농 재배면적을 3100ha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적이 있었지요, 경기도에서?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김재균 위원**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한쪽에서는 유기농 농지를 없애면서 또 한쪽에서는 확대한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요.

장관은 납득이 되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인데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유기농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질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도 살리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도 하는 방안으로 지역에 따라 가지고 농민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대체농지를 조성 또는 안내 그리고 협조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팔당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생계를 잇는 가구만 해서 100여 가구에 종사자만 1000명이 넘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농지가 사라지면 이 사람들 모두 일자리 잃고 실직해서 거리로 쫓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들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저희들이 그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주시 관내 같은 데에서는 대체농지를 조성해서 농민들과의 접점을 찾았고, 양평 유기농단지의 경우에 세계대회를 앞두고 중요한 곳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해법을 찾고자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균 위원** 본 위원에게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김재균 위원** 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2008년 5월 1일 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2012년까지 증권업계에서 3만 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8년 4000명, 2009년 1만 1000명 그리고 3년간 1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 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당시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증권업계에 5년간 일자리 3만 개 생긴다.’ 이렇게 나왔어요.

위원장,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저희가 따로 발표한 건 아니고요, 보도자료를 낸 건 아니고 연구원 이런 데서 추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재균 위원** 이 기사는 분명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라고 신문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해명자료나 정정보도 요청한 적이 있어요? 없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저희들이 해명자료를 따로 내진 않았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한두 군데도 아니고 무려 11개 신문사가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기사화했어요. 그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홍영만 정책관께서 이야기한 내용까지 실려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도 아니고 심지어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한 자료인지 파악도 안 되는 자료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퍼져 나갔는데도 금융위가 해명을 하기는커녕 어떤 내용인지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셈이다, 경위야 어쨌든 이처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전적으로 금융위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지금 위원님,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에 아마 정확하게 얼마 정도 효과가 있을 걸로, 인력의 충원효과가 있을 걸로 추정해서, 아마 연구기관 같은 데서 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그렇게 추정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균 위원** 추정이 아니고요. 여기 홍영만 정책관이 ‘내년에 자통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상품 출시와 소규모 특화·전문화된 금융투자회사 창업이 활성화되어서 증권업계 전반의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해 가지고 인용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소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통계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금융업 취업자 수는 2008년 82만 1000명에서 2009년 76만 6000명으로 무려 5만 5000명이 감소했어요. 같은 시기 전체 취업자 수의 감소율이 0.3%에 불과한데 금융업은 이보다 22배나 높은 6.7% 감소했어요. 당초 금융위원회의 예측대로라

면 1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4배에 가까운 숫자의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위원님, 2008년부터 리먼 사태와 같은 국제금융위기로 해 가지고 저희 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우리나라도 금융뿐만 아니고 다른 제조업 부분은 일자리 감소폭이 더 크다고 봅니다.

○김재균 위원 그래서 자통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우리 민주당이 ‘세계 금융위기로 금융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니까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통법 시행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한승수 전 국무총리 발언입니다. 그래 가지고 법 시행을 강행했어요. 그 결과 시행 1년 만에 3년간 일자리 창출 목표치의 2배의 일자리가 사라진 결과로 나왔습니다.

일자리 3만 개 창출 목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능하기는 한 것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위원님, 지금 자통법 이후에 2008년에 증권회사를 포함해서 금융회사들이, 자산운용·신탁회사 한 20개 늘고요, 2009년에도 한 10여 개가 늘었습니다. 아마 자통법이 아니었으면 더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기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아마 자통법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와 같은 답변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답변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자통법이 일자리 창출 효과 선전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첫 번째 사례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지난 특위 회의에서 본 위원이…… 4대강 사업의 경우만 해도 납득할 수 없는 근거로 34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민들에게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표할 때는 신빙성도 없는 자료를 신나게 발표했다가 거짓으로 밝혀지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 명의로 나간 보도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자료 발표의 오류와 목표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위원님, 저희가 자료 발표한 건 없고요. 그 부분에 흥영만 국장이 멘트한 그것은 자본시장법이 되면 그렇게 효과가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대를 이야기한 거고요.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것들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이런 상황은 세계적인 유례없는 금융위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 부분의 고용감축이 일어나는 거고요, 금융 부분의 고용감축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재일 마무리하시고……

○김재균 위원 자꾸 입장을 회피하려고 하는데요.

금융위는 또 ‘산학연계로 각 대학 내 금융전문 인력과정의 개설 및 금융 관련 인턴십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돼 있는데 자꾸 금융위원회에서는 ‘관련이 없는 자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문건이 나와 가지고 11개에서 대서특필했다니까요, 11개 언론기관에서? 그것은 의도적으로 보낸 거예요.

○위원장 변재일 마무리하시고요.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변재일 이 문제는 정부 부처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고용유발효과를 단순계산해서 발표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은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취업 준비까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됩니다.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에 더 추가논의하도록 하고, 윤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용 위원 서울 강동울의 윤석용입니다.

공무원님들이 고생이 많은데, 지금 복도에 보

면 장관님과 위원장님을 응원하러 오신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보면 실력 없는 장관님들이 공무원들을 많이 대동해 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모자라는 중소기업에 이 공무원들을 보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하면서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한 몇 분 됩니까, 전체?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본부에……

○**윤석용 위원** 한 16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본부에 490명 정도이고 산하기관에 1100명 정도 해서 1600명 정도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지금 장애인 고용률이 얼마나 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금년에 말입니까?

○**윤석용 위원** 예, 별로 많지 않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죄송합니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자료를 보면 2008년도 자료가 있는데 전 부처 중에 가장 낮을 겁니다. 금융위원회 이런 데는 상당히 높습니다, 3.895. 법적으로 고용률이 3% 이상 되는 줄은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런데 장애인하고 척졌습니까? 왜 장애인 채용을 안 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유의해서……

○**윤석용 위원** 그것 하세요. 법에도 위반이 되고 대통령께서도 장애인하고…… 일자리하고 직접 관계되는데, 여기 다른 부처도 몇 군데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서 나올 때는 장애인들 얼마 쓰고 여성도 얼마 쓴다 이런 보고서도 같이 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리고 방송통신 분야는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카피라이터, 작가, IT 기술자 이런 것 장애인들이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위원장께서는 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죄송합니다.

○**윤석용 위원** 2010년도 업무보고에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윤석용 위원** 2009년도부터 '12년까지 연평균 7.4% 성장한다 하고 '12년도에는 170조로 전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망이 가능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저희들이 희망치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달성될지는 지금 저희들도 좀 회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서비스 분야도 물론이지만 방송통신 성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난리를 피워서 법도 통과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윤석용 위원** 그리고 또 '12년에는 방송통신 서비스 66조, 통신기기 89조, 방송기기 14조 생산을 예상한다 이랬는데 일자리는 얼마씩 나오는지, 작년에 발표할 때는 20만 명을 취직시켜 준다 이랬던데 진짜 그리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지금 방송통신 분야의 전체 고용원이 한 30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20만 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좀 가상의 숫자 같은데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담당자에게 문의)

○**윤석용 위원** 자꾸 물어보면 시간 가고요. 빨리빨리 해 가지고……

그러면 사업 확장에 대해서,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또 법도 통과됐으니까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정식으로 보고서로 해서 저한테 보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윤석용 위원** 문화체육부장관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윤석용 위원**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아까 보고서에도 있었고, 볼거리·관광인프라·가격경쟁력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취약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래서 지금 해외관광객들은 많이 정체가 있고 국내관광객들은 자꾸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일단 저희들이 올해부터 2012년까지 한국방문의 해로 3년간을 목표를 삼고, 또 외국에서 손님이 많이 오실 수 있

는 메가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축제라든지 또는 대중상영화제, 부산영화제 또 올해 개장하는 F1 그랑프리, G20 또 내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여수엑스포까지 전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묶어서 외국에 굉장히 홍보도 하고 손님을 모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관광산업은 다른 제조업보다 2배 이상의 취직 효과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윤석용 위원 또 외화가득률도 휴대폰이나 반도체, 자동차보다 훨씬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일반관광객보다 고부가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해 주고 컨벤션 산업 또 크루즈산업, 의료관광 또 전시, 인센티브 관광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고 그 준비사항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윤석용 위원 혹시 서울에 차이나타운이라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서울에는 지금 연희동에 좀 작게 있지요. 인천에만 조금 그래도 구색을 갖춘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세계 각국에 가도 수도에는 다 차이나타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윤석용 위원 우리나라는 왜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윤석용 위원 더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폐쇄적인 외교정책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지금 중국의 거대 관광시장이 부각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고, 외국인·중국 사람이 와서 돈 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인위적이라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 대책을 열심히 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사실은 장관님도 외국에 많이 가지지만 외국에 나가면 별것 아니면서도 볼거리를 인위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는 이 좋은 것도 있고 이런데 출입국 이런 절차도 좀 간소화해 주시고……

국립공원 같은 데는 케이블카 같은 것 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우리나라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케이블카 돼 있는 데는 국립공원에는 거의 없지요. 환경부에서 더 잘 아시는데……

○윤석용 위원 국립공원에 두 군데, 도립공원도 한 다섯 군데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면 진짜 절경인 데도 친환경적인 케이블카도 만들어서 저 같은 장애인도 좀 올라갈 수 있게 만들고, 중국에는 산마다 케이블카 다 만들어 놔습니다. 그것을 너무 환경론 쪽에 치우치지 말고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관광사업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마는 관광객들의 마인드, 특히 종사자들의 마인드도 좀 바꾸고 국민적인 마인드도 좀 바꿔서 관광산업이 정말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부가가치를 알고 앞으로 차세대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특별히 지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지금 저희가 숙박 문제, 교통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된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용 위원 세금 문제, 부동산 보유세 감면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도 다른 부서끼리 서로 종합적으로, 정책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변재일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덕 위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홍희덕 위원 업무보고에서 회원제골프장의 입지기준을 좀 완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성장을 또 이 정부가 많이 얘기하고 있지요? 환경을 오히려 파괴하

는 게 아닌가, 골프장 계속 건설 완화하면? 그래서 저는 좀 모순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업무보고에서 회원제골프장 입지기준 완화를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10km~20km로 되어 있는 이격거리를 7km로 줄이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도 전국에 난립하고 있는 골프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한 지역의 환경파괴와 피해, 지역주민과의 마찰들이 일어나는지 장관님만이 아니고 여기 출석하신 이만의 환경부장관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상수원보호구역 입지규제를 완화해서 골프장을 짓겠다는 것은 수도권 지역에 회원제골프장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정부가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수질보호의 핵심인 상수원보호구역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골프장을 짓겠다는 것이 일자리정책과 그렇게 썩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겠는가 좀 의심이 가고요.

아직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골프장 건설정책이 일자리 창출 계획으로 제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존경하는 홍희덕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 문제는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작년 7월 1일에 대중골프장에 이미 적용된 그런 입지기준을 다른 회원제골프장에 같이 적용을 안 해 줬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기가 된 문제고요.

수질오염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초기 빗물을 어느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를 설치·운영하는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의견수렴이나 그런 절차는 거치도록 하고요.

일자리 문제는 꼭 일자리로 이것을 내놓은 것은 아니고요. 아마 전체적인 제도개혁이나 제도 개선 문제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시간관계상 그렇게 답변 듣도록 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홍희덕 위원 또 보고서에서 보니까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을 통해서 국민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그 자리를 국내노동자들로 채우는 그런 발상은 이미 2008년부터 이 정부에서 제시된 일자리 창출 방법이지만 그 효과가 검증된 바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 도입되고 진행되어 온 내용으로 이미 한국 사회의 노동고용상황의 한 부분으로 사고되어야 합니다. 관련된 노동정책이나 고용정책 역시 이와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 정책은 모두 이주노동자 규모를 축소하면 그만큼 내국인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기조 아래 있는데요, 정부 주장대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로 노동부나 법무부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단속강화에 나섰지만 이것이 국내인들의 고용창출로 이어졌다는 근거가 희박하거든요.

이주노동자 문제는 단순히 내국인의 일자리를 이주노동자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이윤구조, 대학진학률 83%, 한국 사회의 고학력 현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지금 일자리특위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 강화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다시 좀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노동부와 협의해서 2008년부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좀 하셨는데 거기에 국내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된 근거가 있는지, 저는 별로 그렇게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있다면 자료를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관님의 간단한 견해도 좀 밝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이귀남 위원님 말씀에도 참고할만한 말씀이 많습니까는 불체자는 단속을 계속해야 되고요, 다만 합법적으로 근로자로 들어오

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희덕 위원** 자료 제출은 좀 준비한 게 계시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홍희덕 위원**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금융회사들이 인턴 채용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수년 전부터 금융회사들이 인턴사원을 대량으로 채용하고 있는 현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러한 금융 인턴들이 정규직으로 얼마나 채용되고 혹시 전환되었는지 그런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 한 5년간 금융권별 금융 인턴 채용 인원 중에서 정규직 전환된 자료가 있으면 꼭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희수 위원** 예.

금감위 부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자영업자?

○**정희수 위원** 예.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정확하게……

○**정희수 위원** 한 5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정희수 위원** 그러면 사실 자영업자가 평균 한 사람씩만 추가 고용하더라도 한 500만 명이 되고 그 반이라 하더라도 한 250만 명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렵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금융위의 경우에는 지금 백화점하고 자영업자하고의 카드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지난번에 저희가 자영업자 재래시장과……

○**정희수 위원** 아니, 몇 %인지 그것 한번 이야기만 해 보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지금 평균이 백화점은 한 2% 이내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2% 초반대고요, 자영업자 중소 가맹점들은 평균적으로

한 2.5% 이렇게 가 있다가 최근에 백화점보다 더 낮게……

○**정희수 위원** 백화점은 1% 대입니다. 1.5%, 2%가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영업자는 엄청 높습니다. 한 3%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익부 빈익빈,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당정에서도 계속 카드 수수료를 좀 낮춰 달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안 돌아가. 어떻게 좀 이렇게 과감하게 낮춰 줄 용의가 없는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가 정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여신전문업법 개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카드 사업자들이 앞으로 중소 가맹점이나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보다 카드 수수료가 같거나 낮도록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그렇게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희수 위원** 똑같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고쳐서 이렇게 다 시행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정희수 위원** 똑같이 쓰는 건데 백화점은 더 싸게 카드 수수료가 적고 자영업자가 높다 하는 것은 안 맞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그렇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철저히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또 하나, 미소금융 경우에는 이것 소리는 요란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적이 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한 5000억 원, 이렇게 자금이 실질적으로 대출되는 것은 한 47억밖에 안 되거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정희수 위원** 그러니까 한 5000명 넘게 신청을 하는데 지금 계속 심사 중이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10% 정도 남짓 이렇게 대출을 받고 있던 말이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정희수 위원** 이것도 뭐가 잘못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소금융을 사칭해서 또 나쁜 짓 하는 쪽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

용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철저히 서민을 보호해야지 이것 사칭해서 또 잘못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하면 그것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그렇습니다.

○**정희수 위원** 이것도 제대로 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미소금융이 어떻게 잘 정착할 수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리고 카드 수수료도 타임 스케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같도록 하겠다 하는 것도 함께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법무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근로자들은 54만 명쯤 됩니다.

○**정희수 위원** 54만 명입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정희수 위원** 불법 체류자는 얼마나 파악?

○**법무부장관 이귀남** 17만 명쯤 됩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면 한 70만 명 가까이 되네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정희수 위원** 그러면 이 인원, 근로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수준을 유지합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수준을 유지하고 불법 체류자는 계속해서…… 2008년도에는 20만이었습니다마는 현재 17만으로 줄었기 때문에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외국인 근로자들에 따라서 국내 노동 인력시장에 어떠한 부작용이 되는 그런 것은 관계 부처하고 잘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정희수 위원** 그런데 법무부 쪽에서는 사실 재소자들을 형벌 주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재소기간 동안에 심리적으로 모든 것이 제대로 잘 교화가 돼서, 교정이 돼서 다시 재범

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교육을 하고 심리적인 치료를 하게 된다면 나는 상당히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한 그러한 심리적인 치료라든가 일자리라든가 다른 쪽으로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고한 것 보면 상당히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일자리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자체에 TF팀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저희 교도소 내에 직업훈련교도소가 전국적으로 지금 2개나 있고요, 각 직업훈련교도소가 아닌 곳도 다 그렇게 일자리…… 직업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런데 너무 산만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재소자가 사회에 나간다 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분이 그야말로 잘 정착하고 있고 하는 사후관리 이것도 나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DB나 인력을 지속적으로 법무부가 관리를 한다면, 다시 말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법무부가 일자리 창출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고 사회 안전망 구축도 재범이 일어나지 않는, 나 이것 엄청나게 중요한 부처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라든가 타임 스케줄 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정희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게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범을 안 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예, 그리고 또 앞으로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엄청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게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해서 비용을 낮춰 줌으로 해서 법률 서비스가 보다 보편적으로 생활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함께 서면……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 부분도 지금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함께 서면보

고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그러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나머지 문광부하고 이것은 내가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예,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민주당 부평을 홍영표 위원입니다.

금융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면서 금융 공기업에서 대출 또는 보증심사 시에 기업의 고용 창출효과가 반영되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홍영표 위원** 그리고 이미 또 금융 공기업에서 특별자금이나 특별보증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고용 창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추진되고 있으니까 자료가 있으면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지금 위원님, 개별 공기업별로 앞으로 이런 여신심사 고용 창출효과를 심사할 때, 대출이나 보증할 때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계량적·비계량적 이런 비 재무적 요인으로 해서 평가를, 가점을 매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5월 이후부터 각 개별 은행별로 여신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개정 작업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하고 이런 내용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앞으로 계획 중이다 이런 말씀이 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홍영표 위원** 저는 우선 저희가 금융위기 이후로 사실 금융권의 급여 체계, 인센티브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홍영표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본 자료에는 아마 금융위기 전에 영국의 금융 중심지 시티에서 시티의 문제를 한번 거론한 것을 봤습니다. 영국

의 시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대략 한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만 명인데 영국 전체 법인세의 25%를 냈습니다, 40만 명이. 아마 영국의 인구가 6000만이기 때문에 이 40만 명이면 인구의 약 몇 %입니까? 굉장히 적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이 분야에서 법인세 4분의 1 정도를 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의 양극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40만 명 속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연봉과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금융권으로만 집중되는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국가 경제 전체에서 인력의 어떤 균형 있는 배분 이런 것의 왜곡된 게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데서는 결국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데 그것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금융산업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금융산업과 다른 산업 분야와의 이런 어떤 급여 체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위원님, 그 금융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다른 미국이나 금융 선진국 일본이나 영국 이런 나라와 비교해서도 특히 은행이라는 우리 제2금융권의 보수 체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생산성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또 국내 다른 제조업체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고임금 구조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고임금 구조를 개선해야 새로운 인력을 많이 뽑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무튼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융시장도 저희가 아직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금융 쪽의 그런 임금 수준을 낮출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이런 일자리 창출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왜곡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런 어떤 기본적인 데이

터가 좀 있습니까?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 어떤 금융권의 임금 체계나 이런 것과 비교한 게 있나
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위원님,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한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좀 대략적인 데이터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평균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내에 신규, 처음에 대졸자들이 취업할 때 국내 은행권의 취업부터 2~3년차 안의 임금은 예를 들면 한 3500, 4000만 원, 연봉이 이렇게 된다면 거의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기업의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홍영표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 점유율이 2008년도에 세계시장의 2.4%이고 온라인 게임은 22.5%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래서 특히 지난 3월 17일에 ‘2013 CAN 혁신’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홍영표 위원** 이 자료에 따르면 13년까지 시장 매출이 13조 원, 수출이 8억 3000만 달러, 이것을 토대로 해서 신규 고용을 6000명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 현재 시장 규모가 8조 6000억이고 해외 수출 규모는 3억 30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3년 만에 2013 CAN 혁신 계획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2008년도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 재학생 수가 2만 2953명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06년 1만 3258명에서 73% 증가했습니다. 2년 만에 73% 증가했는데요.

이 졸업생 수가 매년 5000명 이상 이렇게 배출되고 있는데 2013년 CAN 혁신에 의하면 신규

고용이 600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자리가 계획 대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 CAN 혁신 계획에 따르더라도 이렇게 고용 창출 효과가 미미한 것 같은데 신규 일자리 창출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먼저 앞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만화·애니메이션 쪽의 평균 성장률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2013년까지 이 정도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수치를 만든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장보다는 우리가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가 아무래도 지금은 추세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만화도 2D에서 3D로 옮겨지고 있고 3D에서 4D로 오히려 가는 그런 추세로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좀 그렇게 고용 창출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000명이라는 숫자는 좀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본 것이고요.

지금 특히 이 콘텐츠 산업 자체가 창작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수출보증보험이라든지 완성보증보험이라든지 가치평가제도 이런 것들을 다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펀드라든지 투자가 잘 이루어져서 아마 그런 것들이 고용 창출에…… 보이지 않는 숫자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6000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했는데 아마 예상하기로는 금융 쪽의 펀드가 잘 돌아가면 훨씬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예, 이상 말씀 없지요?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강석호 위원님 질의까지만 받으시고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강석호 위원** 한나라당 강석호 위원입니다.

오늘 내부적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또 제도 개선, 규제 완화를 위해 애쓰시는

데 먼저 노고가 많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2008년도에서 2010년까지 일자리 창출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가 가장 피크로 올라갔는데 약 4조 7000억, 2010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한 3조 5800억입니다.

일자리를 위해서는 계속 이런 국비 지원이 뒤따라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저는 오늘 장관님들께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또 제도 개선을 해서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건수는 그 부처에서 실적은 얼마나 되겠느냐……

보고서에 보면 국비를 통한 일자리 건수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제도 개선이라든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 부처에서 관련된 민간 일자리 창출 조성 건수는, 우리는 얼마만큼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기대효과는 얼마나 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최시중 위원장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개별 기업에 대한 통계를 미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예상치가 없지요?

문체관광부장관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들은 지금 그런 제도 개선이나 여러 가지로 굉장하……

○**강석호 위원** 건수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많습지만 실제적으로……

○**강석호 위원** 아니, 민간 거기에 대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런데 그것을 수치로 정확하게 예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강석호 위원** 예상치의 수치는 목표를 세워 놓고 실적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강석호 위원** 법무부장관님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저희들도 그 구체적……

○**강석호 위원** 환경부장관님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여러 요인이 중복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석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 일자리창출특위에 있으니까 오늘 나오신 여섯 분 부처에서 그 부분을 한번 예상 시뮬레이션을 해서 저한테 보고서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제가 기업 부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는 B2C 영역에서는 불공정 거래 단속을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B2B 거래에서는 손을 잘못 대고 있다……

그 애로 사항이 있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예, B2B 중에도 여러 유형이 나누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예를 들어서 대기업 집단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등, 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진입하지 못하거나 퇴출되는 그런 경우 등 이런 부분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고 있거든요. 증거 자체가 없으니까, 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중소기업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B2B 거래에서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특히 우리나라에 왜 화물연대가 생겼습니까? 그것을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면 바로 거기에는 대기업의 그런 횡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위원장님께서 대전상공회의소 초청 특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긍정적 역할은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예,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저는 그 말에 아주 동감을 합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예,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석호 위원**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더욱더 철저히 수행을 해 주신다면 시장경쟁이 또 활성화되고 기업 경쟁력이 더욱 올라갈 것이고 그럼으로써 각 분야에서 일자리가 증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지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 업무 추진하던 방향 이랄까, 정책의 기본적인 추진 내용하고 일치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진입규제 제거 작업입니다. 진입규제를 제거하면 일단 진입규제 안에 있던 사업자들은 충격을 받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창달이 되면서 경쟁이 촉진이 되고 새로운 잡(job)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석호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아까 제가 지적한 B2B 거래에 대한 실례를 하나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도 한층 더 강화를 해서 그런 부분부터 없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예, 알겠습니다. 특히 대기업 집단 안의 계열사를 위해서 이렇게 물량 몰아주기 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부당지원행위 틀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전반적인 조사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데 너무 중복되고 또 난립이 되어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재정지원일자리정보는 일모아 사이트에 올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환경부를 보니까 일모아 업무지원 시스템에 보니까 노동부가 3만 3551건, 보건복지부가 340건, 행안부가 275건, 환경부는 2건뿐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일모아 업무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각 부처 업무 담당자에 대한 실무 교육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환경부가 왜 이렇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 답변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챙겨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못 챙

겼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기 때문에 챙겨서 보고드리고,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강석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석을 하셔야 되면 세 분 장관님, 두 분 위원장님, 차관님들이나 부위원장이 와 계시면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九 委員 하필 저 할 차례에 어떻게 주역이 전부 바뀌어 버렸네요.

법무부 차관님, 이전에 장관님께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 TO를 줄이고 있지요?

○법무부차관 황희철 예, 외국인 근로자를……

○金容九 委員 숫자를 줄이고 있지요?

○법무부차관 황희철 예.

(변재일 위원장, 정희수 간사와 사회교대)

○金容九 委員 그 원인은 결국 우리나라 일자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황희철 저희가 일자리를 위해서 그런 건데요.

○金容九 委員 외국인이 자꾸 차지하니까……

○법무부차관 황희철 3D 업종보다는 서비스 업종에 있어서 우리 국민과 일자리를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金容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제가 외국인 근로자 관계를 한 3년 취급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외국인들이 외국에서 인식하기는 한국에는 들어가는 무척 힘이 드는데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숫자를 줄이더라도 뒷구멍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체류하면 직간접으로 우리나라 일자리를 결국은 차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외국인 불법 체류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국내 일자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째에 문화체육차관님, 여기 보고

서 9페이지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하는데 ‘골프장 입지기준 완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골프장이 늘면 거기에 일하는 종업원도 느니까 그렇지만 이것 조금, 내세우기는 정서상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신재민** 정부 전체의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미 대중 골프장의 경우는 입지 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사회적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문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경우에—어떤 수원지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모두 풀겠다는 것보다는 그런 주의를 좀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金容九 委員**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골프장을 내세워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 정서상 맞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참고하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신재민** 예, 알겠습니다.

○**金容九 委員** 공정거래위 부위원장님, 지금 우리나라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를 최근 3년간 보면 2007년도에 1527건, 2008년도 1438건, 2009년도 1387건, 그래서 4352건쯤 되는데 여기에 대한 벌칙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보면 89.3%가 경고와 조정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그렇게 불법으로 해도 별것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대기업이 자꾸 이것을 반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일자리 창출은 이때까지 중소기업이 창출을 해 놓았지—대기업보다는—과거의 우리 불경기 때를 죽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데 대기업이 이런 불공정 거래라든가 불공정 하도급 같은 것을 해도 이게 너무 숨방망이니까 이런 게 자꾸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좀 강화할 용의가 없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저희가 대·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공정화하기 위해서 최근 2007년도부터는 종래와 달리 과징금도 같이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하도급 대금을 가령 미지급했다든지 그러면 하도급 대금만 지급하도록 명령했는데 하도급 대금 지급 플러스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식으로 저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런데 이 과징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과징금은 국고로……

○**金容九 委員** 국고로 가고 있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예.

○**金容九 委員** 그러면 결론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중소기업 업체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됨으로써 과징금이 발생했던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국고로 징수해 가지고 사용할 게 아니라 납품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해 준다는가 이런 제도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지금 현재도 가령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든지 또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든지 또는 늦게 주면서 이자를 안 주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전부 실제 피해 발생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런데 그것은 대금이 안 났거나 거기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거지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지급은 없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金容九 委員**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어떤 지급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실 용의가 없으시냐 이 말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金容九 委員**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예.

○**金容九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광림 위원** 금융위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소금융, 그러니까 보고서 11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미소금융이 작년 12월부터 저소득·서민층한테 ‘무담보·무보증’ 이래서 창업자금하고 운전자금을 빌려 주기 위해 가지고 그 재원은 은행에 잠자고 있는 휴면 예금, 그다음에 민간의 기부금, 이런 것을 재원으로 해서 시작하고 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김광림 위원** 이 보고서에 보면 ‘금년도 3월 30일 현재 전국에 전부 34개 지점을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보니까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반반 정도 되어 있고, 돈은 648명한테 총 47억 원—백 자가 없이 그냥 47억 원—정도를 했는데 이것을 전체로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원실적이 굉장히 낮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의 신용 실적이라는 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냐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금년 1월에는 100명이 와 가지고 한 3명 정도가 받아 갑니다. 그다음에 좀 좋아져 가지고 2월에는 100명 중에 한 2명, 그리고 3월에는 100명 중에 3명, 나머지 사람들 전부 돌아가면서 아주 섭섭한 감을 이야기하고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인이, 그러니까 지원받지 못하는 원인이 뭘지 혹시 부위원장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은행에 돈 떼어먹은 실적이 부족해 가지고, 그러니까 은행에 연체를 좀 덜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신용등급이 1등급부터 10등급이 있으면 7등급 정도 되어야 이 대상이 되는데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면서 일수 쓰시다 하신 분, 남의 돈이라고는 떼어먹어 본 적도 없는 분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오시면 편안하게 모셔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해 가지고 할머니는 안 되시기 때문에 지역신용보증기금 쪽에 소개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소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오면 조건을 이렇게

사정을 해 가지고 ‘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1월 같으면 1000명 중에 3명 되고 997명은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할머니, 아저씨, 이 부분은 이렇게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아니고 여기 찾아가서……’ 안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기능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보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반반 지점 설치했는데 앞으로 20개 더 한다고 그랬지요? 그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김광림 위원** 이것을 할 때 지방에 좀 우선해 가지고 지방 중소도시에 좀 되도록 해 달라는 애기인데 지방 중소기업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연간 한 7500만 원 정도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김광림 위원** 사람 새 사람 쓰고 집기 사주고 하는데 사무실 임대료가 그 속에 없어요. 사무실 임대료가 없으니까 어디에 하느냐 하면 시장이 있는 부근에는 비싸서 못 가고 저 골짜기의 어디가 가지고 넓은 공터를 정해 가지고 사무실을 정해 놓으니까 찾아가기도 힘들고 안 되게 되거든요.

제일 좋기는 시청의 민원실 같은 데 옆에다가 붙이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에 행안부 쪽하고 청와대 담당 수석들이 계시는 자리에 공문 좀 하나 보내 달라고…… 왜 그러냐 하면 시청의 경우에도 사무실이 비면 신부님이 운영하는 복지 또 농업단체 이런 분들에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쓰시는 사무실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문 하나 보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들어오는 시간까지 공문이 도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것 확인을 꼭 금융위에서 한번 해 주시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김광림 위원** 제 지역구에서는 다행히 시장님께서 시에서 임대료를 부담해 가지고 아주 요지에 해서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있으니까 꼭 좀 그렇게 하고, 혹여 앞으로 20개 이렇게 신규로 인가를 해 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심 정도,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 가지고 이렇게 아주 공공건물을 주든지 예산을 내 가지고 하는 곳에 우선해서 해 줄 수 있는 그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위원님, 공문은 4월 2일자로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개는 다 지방에 설치할 거고요. 지방에 할 때 관공서를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행자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행자부 협조해 가지고 관공서한테 강하게 얘기해 가지고 무료로 좀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김광림 위원** 지금 지역에 따라서는 전교조한테도 무료로 공간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일수 쓰는 아주머니들한테 주는 금융은 꼭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페이지 6에 고용 증대를 하는 경우에 대출에 좀 유리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했는데 이것 참고로 수출입은행의 예가 있으니까 이것 좀…… 직접 금융위에서 각 은행에 이렇게 지시하거나 협조문 보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것은 은행연합회 같은 데 사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좀 해 주면 좋은데, 수출입은행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고용자 수를 늘리면 이자율을 깎아 줍니다.

예를 들면 대구에 있는 어떤 P 기업의 경우에는 직원을 555명에서 33명 늘리는 경우에 100억 원을 지원했는데 늘리고 대신에 0.5% 이자를 내려 주었어요, 한 5000만 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가고, 이 제도를 도입하고 3월 한 달에만 28개 기업에 1156억 원이 이번에 대출됐는데 이런 사례들이…… 고용하고 직접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 경우에 절차를 좀 줄여 주고 대출 이자를 좀 낮춰 주는 이런 사례들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홍보하고 권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김광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한나라당 서울 관악 갑 출신 김성식 위원입니다.

많은 부분은 서면 질의를 해 두었습니다. 서면

답변 모두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중에 시간이 닿는 대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차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소자 직업 훈련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황희철** 예.

○**김성식 위원** 재소자 직업훈련제도가 많이 현대화되었습니까, 직종의 면에서나 교육 과정의 면에서나?

○**법무부차관 황희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현실에 필요하고 또 구직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 결과 재소자들이 출소했을 때 자격증을 따든가 아니면 구직을 했을 때 구직의 양이나 고용의 양이나 질 면에서 개선이 있었다는 내부적인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까?

○**법무부차관 황희철** 최근에 저희들이 취업률을 계상하고 있는데 최근에 출소자들이 33.1%가 취업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향상된 수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제가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김천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직업 훈련하는 곳도 사실 간접적으로 볼 기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의 종류와 그때 교도소에서 재소자를 가르치는 내용의 미스매치가 컸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교육 방식, 교육 내용, 교육 기자재 등에 있어서 최근 한 5년간 어떤 예산 투자가 있었고 변화가 있었는지, 그에 따라 실질적인 고용 실적이 얼마나 양과 질 면에서 향상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황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방통위 부위원장님과 금융위 부위원장님께 같이 묻겠습니다.

공인 인증서 관련해서 Active X에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어디까지 개선하고 있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 부분을 완료할 것인지 짧게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도 혹시 아시겠지만, 당정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공인 인증서와 거의 맞먹을 정도의 수준

의 보안성을 갖고 있으면 그런 것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에 총리실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모여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요. 또 저희들도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금융 회사들한테 그런 것을 또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모바일이나 인터넷 결제에 있어서 Active X를 전제로 한 이런 폐쇄적인 구조가 여러 가지로 창의적인 사업이나 또 외국인들의 관광 지출에 있어서나 많은 제약 요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기득권자들에 의한 방어막이 매우 큼니다. 이 문제를 방통위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경자 지금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공인인증서 의무화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고요. 그 방향으로 저희가 아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겁니다.

○김성식 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 물겠습니다.

한 대기업이 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당신이 개발한 그 기술과 연관된 부품은 우리 회사에만 납품하라고 요구하면 공정거래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 외에도 아까 존경하는 여러 우리 일자리특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그 자체로 바게닝 파워(bargaining power) 면에서 갑을이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예.

○김성식 위원 그런데 눈물을 머금고 신고도 못하고 애로 사항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이고, 그 외에도 환리스크는 모두 다 이익 볼 때는 전가하지 아니하고 손해 볼 때는 다 전가하고 기타 여러 가지 소싱에 있어서 계약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해당 부품 소재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 1년 하다가 끊으면 다 망하는 이런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간혹 단속은 조금씩 하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

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짧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예컨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유용하거나 또는 탈취해 가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금지 행위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기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횡포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공정거래법이나 또는 하도급법을 적용해서 엄격히 시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다윈의 진화론도 강자생존이 아니고 적자생존이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예.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기업…… 우리나라 시장경제가 활기차게 발전하려면 큰 기업이 승리하는 시장이 아니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이 승리하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되겠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서면 질의도 해 놓았지만 이런 불공정 관행의 유형, 그다음에 최근의 민원 및 관련 신고, 그것에 따른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서면 자료를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다음에 프랜차이즈나…… 요즘 자영업자들이 그냥 혼자 통닭집을 내거나 햄버거집을 내면 장사가 안 되니까 대형 어떤 브랜드를 하나 만든 쪽에서 여러 가지로 중소 자영업자들을 흡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예.

○김성식 위원 그런데 약관 심사를 나름대로 하세요. 그래서 간혹 언론에도 보도되곤 하는데, 약관 심사와 별개로 실태 조사를 한번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상황의 윤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향후 자영업자들이 나름대로 프랜차이즈 구조화로 계속 갈 경향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동안 실태 조사를 수요자 쪽에서, 프랜차이즈에 가맹하고 있는 업체 쪽에 대해서 표본 형태로라도 체계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예, 저희가 간혹 서면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저는 그렇게 하셔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돈 들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프랜차이즈 가맹 업체들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원이 가서 표본 조사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약관 내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약관과 별개의 사항에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망할 때는 다 덤터기 쓰고 이익 볼 때도 계속 손해를 보는 이 구조를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좀 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 실태조사계획서가 정리되면 저한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기타 내용은 서면질의를 해 두었습니다. 수고하시는 차관님들 또 공무원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성의껏 답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출신의 박준선 위원입니다.

문정호 차관님, 차관 승진하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 문정호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축하합니다.

○환경부차관 문정호 감사합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서 차관 승진한 기념으로 한번 제가 여쭙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10%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환경부차관 문정호 예.

○박준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자리특위까지 만들면서, 국회에서 이런 특위를 만들고 범

정부적으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일자리가 늘지 않고 청년실업이 10%가 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정호 차관님께서?

○환경부차관 문정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일자리 시장하고 공급하는 인력 또 희망하는 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미스 밸런스, 미스 매칭 부분이 상당히 청년실업의 경우에는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준선 위원 지금 환경부차관으로서 청년실업 문제를, 노동부차관도 아니고 답변하기 참 어렵지요? 신재민 차관님도 그렇고 법무부차관님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차관님들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 할 일에 대해서도 그런 원인과 그다음에 할 일에 대한 어떤 대책이 유기적으로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 특위를 열고 일자리 만들기 또는 일자리 찾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오라 하니까 이제…… 안 봐도 뻔합니다. 각 부처에서 ‘빨리 일과 관련된 것 다 모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광부에서는 골프장까지 언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골프장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법무부나 이런 데서도 다 각 부처별로, 각 부·과별로 짜집기를 한 흔적이 아주 역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업무보고를 계기로 해 가지고 장관님과 차관님, 업무의 수장, 부처의 수장들께서는 깊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를 가셨는데 한번 노동부장관이나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장관님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부처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한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말고, 그 중에서 하고 있는 일이면 확대를 하고 안 하던 일이면 새로이 하고, 뭘로 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지금 법무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두 분이 지적하셨는데 외국인 근로자들 또는 불법 체류자를 단속해서 일자리를 확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맞는 말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또는 현재의 추세에 과연 그 워딩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거부감이 있지 않느냐, 일반적인 외국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과연 그렇게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면 바로 일자리가 국내에 있는 내국인에게 갈 것인가, 거기에서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리고 오늘 법무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진 현황과 그다음에 추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망라를 해서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런 것 중에서 과연……

법무부에 지금 출입국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황희철** 예.

○**박준선 위원** 그러면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해외에서 찾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 같은 것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가지고 1000자리인가 1만 자리를 늘려서 왔다 그래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일하면서 공부할 기회를 가졌다고 홍보했던 기억나시지요?

○**법무부차관 황희철** 예.

○**박준선 위원** 그게 외교통상부의 일인지 법무부의 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도 출입국 업무가 있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비자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주무부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지요?

○**법무부차관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은 오늘 이 보고서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문광부도 그렇고 지금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금융위원회, 와 계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박준선 위원** 금융위원회에서는 과연, 금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과 규제 개혁 또는 정책 중에서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민간의 일자리를 늘릴 것인가……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턴을 고용한다든가 정부의 예산을 직접 투입해서 그것을 바로 고용으로, 고용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민간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어떤 규제를 개혁하고 또는 어떻게 규제를 하고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어떠한 재량행위가 있을 때 그런 재량행위를 이용해서 기업인들에게,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현 시점인데 오늘 이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면 각 부처에서 결국은 이런 특위의 업무보고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백화점식으로 일단 부·과별로 취합을 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은 때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보고도 되고 때로는 기재위에 보고도 되고 또는 어디에도 보고되고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보고되고 여기저기 끼워 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문광부에서 얘기한 골프장, 그것도 규제개혁특위에서 보고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한 가지 팩트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각 부처에서 이런 것 말고, 그동안 했던 것 말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원하고 또는 청년실업으로 인해서 허덕이는 우리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은 보다 획기적인 조치들을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조치들은 더 이상, 계속하면 된다. 그렇지요? 지금 법무부를 비롯해서 환경부 환경전문위원 양성, 그다음에 금융위에서 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이니 이런 것들은 하던 것은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확대를 위해서 적대적인 게 아닌 이상은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자리특위를 통해서 국회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하지 않았던 보다 획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은 없는가에 대한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에서의 관료들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서나 그동안 여기에 들어가 있던 것을 제외하고 여기에 없는 것에서 법무부, 환경부, 그다음에 문광부에서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그다음에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플랜,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되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토론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

에 이 정도로 개괄적인 내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토론회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것을 마치고 오느라고……

장관님들께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우선 미디어법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가셨네요. 이경자 부위원장님께 대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미디어법 때문에 굉장히 논란도 많았었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방통위에서. 그래서 이삼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나 이런 데에서 이것 과장된 거다라고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자체를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 과거 2003년도 기준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사실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이 보고서를 낸 것이 작년 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이미 05년 기준 산업별 취업유발계수가 발표가 됐었고 그래서 방송서비스 분야가 14% 정도로 취업유발계수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취업유발계수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원래 13.76명이었는데 07년도에는 10.9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근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방통통신위원장이 관훈토론에서 이것을 바꾸겠다 그랬었습니다. 통계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겠다 했는데 일자리 창출 규모 수정을 했습니까, 부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경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KISDI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각계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애초에 KISDI 보고서가 2006년도 우리나라 GDP를 근거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방송 시장의 비중을 계산했는데 그때 애초 보고서에 인용됐던 우리나라 GDP 자료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이후에 저희도, 우리 위원장도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인정하셨고요. 그다음에 KISDI에서도 자체적으

로 그것을 인정을 했고 그래서 그다음에 다른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결과는 하여튼 우리나라 GDP 대비 방송통신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 성장의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잠정적인 결론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측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측이 반드시 현실화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의문으로 남아 있는 분야입니다.

○**최영희 위원**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계속 이삼만 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디어법 자체를 문제가 있는 미디어법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때문에 국민은 그냥 감내하는 이런 현상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국토해양부가 보고를 할 때 국토해양부에서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4대강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도 역시 그것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혹시라도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좀 정확한 통계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호관찰관 제도 때문에 법무부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수형자 및 소년원생의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 또 사회적기업 현황 및 운영 실적 등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빠른 시일 내에 내 주시고요.

○**법무부차관 황희철** 예.

○**최영희 위원** 또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4월에 개관한다는 여성출소자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보호관찰 업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보호관찰 업무

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발찌라든지 또 자원봉사 업무, 형 대신 벌금, 이런 것 합해 가지고 자원봉사 업무까지도 보호관찰 업무로 일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보호관찰 업무의 인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준비되고 계십니까?

○**법무부차관 황희철**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기재부에 지금 증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보호관찰 업무가 영국에서는 관찰관 1명이 23명을 맡고 있고 그리고 선진국들은 평균 58명인데 우리나라는 178명입니다. 한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는 사람들이 178명이나 되고 사회봉사도 영국은 42명, 미국은 80명, 호주는 57명인데 우리나라는 286명입니다. 보호관찰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보호관찰소에 가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NGO 단체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보호관찰관들이 상당히 사명감이나 헌신성이 좀 부족하고 너무 관료적인 것 같다 그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나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교육과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전문성 이 부분도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황희철** 그 지적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혹시 1분 더 주십니까? 안 주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다 동의하시죠 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예.

○**최영희 위원** 그런데 이 중소기업들이 기를 펴수 없을 정도로 납품단가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납품단가가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 통계 수치까지 다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실 생각이신지, 지난번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대신해서 지난해 4월부터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일견 저희는 성공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작년 말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한 기업의 70.9%는 조정 신청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납품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38.8%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현장에서 좀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홍보도 하시고 또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하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예, 저희가 그동안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된 뒤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등과 협조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알려져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영희 위원** 예, 이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지원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안철수 대표가 한 말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정부에게 손만 벌리고 어떤 지원을 하는 이것이 아니라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예.

○**위원장대리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래서 본 질의는 다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안 되시니까, 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배은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도급 관련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줄 때 불공정하게 주는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어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정보사업에서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예.

○배은희 위원 예,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중소기업이 여기를, 이 정보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 하도급으로 대기업이 들어가는 그런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단속하실 수 없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하도급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으로는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관련된 사안 같습니다.

○배은희 위원 예.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거기에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주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런 행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저희도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배은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라든지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해 놓아도 현장에서 이렇게 편법으로 대기업이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법 개정으로 한계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서 이런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을 개정하면 또 다른 편법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잘 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예, 앞으로 상생협력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 부분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예, 그리고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해서 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만날 퍼센티지로 이 자료를 주시는데, 이게 지금 중소기업이 잘 모른다는 것도 한 50% 되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예, 아직은……

○배은희 위원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50% 되고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예, 그렇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다음에 진짜 이것을 조정신청을 해서 몇 건이 왔고 그 중에서 얼마가 단가가 반영이 됐다 이런 자료가 와야 되는데 저희가 자료를 달라 그러면 몇 %, 뭐 50% 이상에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건수로 로 데이터(raw data)를 잘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자료가 좀 있으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그것은 표본조사였고요. 1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배은희 위원 표본조사로만 하신 거지요? 전수, 총 몇 건이 이 제도 시행 후에 실제적으로 협의가 됐다 이런 것은 안 갖고 계시나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배은희 위원 이게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협의가 불충분했다 하는 것도 한 30% 정도 되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예.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진짜 잘 되고 있는지, 보내 주신 자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현장에서는 불만족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더 잘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다음에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이게 법 통과가 되어서 지금 시행령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예.

○**배은희 위원** 예, 그 시행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지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용을?

그러니까 시행령에서는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할 사항이라든지 통지와 회신 방법, 이런 것을 지금 넣는다고 그러시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예.

○**배은희 위원** 거기에서 뭐라 그럴까, 음에 해당하는 업체의 요구사항을 잘 수렴해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저희가 그 시행령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그 업체의 의견 다 수렴하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예,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손인옥** 예, 준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님!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김재균 위원** 자통법 시행 이후에 일자리가 줄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오늘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부분은 감소 폭이 더 크다, 오늘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김재균 위원** 맞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제가 아는 자료는 금융 부분이 오히려 감소 폭이 좀 적다, 제조업 보다는, 작년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나갔다 왔어요. 지금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봤는데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취업자 수가 금융업이 6.7% 감소했고 반면에 제조업은 3.2%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사실을 왜곡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발언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의 질의에 사실이 아닌 거짓 통계로 이렇게 답변하고 위원이 내용을 모를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더 그 자료를 챙겨보고 위원님께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아니, 자료를 제가 가서 뒤져 가지고 가져왔다고요. 제가 아는 상식하고 틀려서 이상하다고 여겨서 제가 다녀왔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김재균 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위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김재균 위원** 분명한 것은 자통법 시행되고 나서 다른 업종보다 금융업 취업자가 훨씬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은 국가통계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답변 가운데서도 자통법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 같아요, 상상해서 이런 답변한 것 같아요. 가설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통법 시행 이후에 고용창출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금융위에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들의 금융업 취업자 수 증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주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서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통법 시행을 둘러싸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가 당연히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금융위가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제도를 시행했으면 사후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주 안에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 드립니다, 정식으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김재균 위원**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미국이 1996년에 통신법을 통과시킨 바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의 언론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미디어법과 유사해요.

당시 미국에서도 법이 통과되면 방송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아나운서는

6020명이 줄어서 13.4%가 감소했고 기자는 1180명이 줄어 가지고 6.7% 감소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정보통신정책 연구원이 발간한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자료를 제가 봤는데 미디어법 통과로 2만 1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2조 9000억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경자** 예, 그런 보고서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 내용이 엉터리라는 주장이 이미 여러 군데에서 지적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경자** 예, 그 자료가, 사용된 통계자료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시인을 했고 연구한 연구소 측에서도 오류가 있음을 시인을 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동안 미디어법에 가해졌던 여론 독과점이라든지 정부의 언론통제 비판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미디어법으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의 경우처럼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큰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경자** 특히 방송이나 통신 분야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증가하는 추세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발달의 속도라든지 기술의 속성에 따라서 그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제도가 변화하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증가한다는 추세로 보면 또 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데요, 단지 직능별로 혹은 분야별로는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분야가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재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앞에서 지적했던 자통법처럼 미디어법도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봐왔을 때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가 나올 공산이 크다, 실제로 언론노조나 시민단체에서 이미 2006년에 국내 방송시장의 규모가 포화상태에 도달해 가지고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과열경쟁으로 일자리 4만 개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논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해서 지금이라도 일자리 감소 예상치를 포함시켜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자료를 다시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요. 만약 미디어법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설득력 있게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정부 스스로가 잘못된 법안 처리임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서 법 시행을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자통법이나 미디어법 관련해서 이것 시행한 뒤 어떻게 된 것인지, 일자리라는 것은 금방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한계도 있고 하니까 정부 해당 위원회에서 중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모든 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경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수** 다음은 윤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용 위원** 서울 강동울의 윤석용입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켰다가 들어오니까 장관님보다 훨씬 실력 있는 차관님으로 전부 다 교체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깥에는 아직도 놀면서 월급 주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잠자고 책 보고 TV 보고 명상에 잠겨 있는 이분들의 일자리를 좀 바꿔 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체부차관님 반갑습니다.

우리 문체부도 장애인 고용률이, 좀 제대로 법을 안 지키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신재민** 예, 미달한 게 사실입니다.

○**윤석용 위원** 그것 법무부하고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지적이 안 되도록, 특히 일자리 할 때 거기 지적이 안 될 수가 안 없겠습니까?

차관님, 문화콘텐츠가 지식이나 노동집약형이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한국형이 맞다고 하

는데 주로 온라인게임, 한류드라마 빼놓고는 별로 국내 내수용이지 외국에 진출한 게 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신재민 아직은 국제 경쟁력이 좀 뒤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콘텐츠 산업 중에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게임 이런 현실인데……

○윤석용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되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신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또 사실은 이걸 저해하는 요인 중에 불법복제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신재민 그렇습니다.

○윤석용 위원 또 이것으로 해서 매출 손실뿐만 아니라 고용 손실이 엄청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신재민 지금 현재 저작권보호만 만약에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현재 시점에도 생산효과가 최소한 약 2조 5000억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래서 이런 산업화를 저해하는 요소는 근원적으로 근절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익성을 제고하고 기금 확충하고 완성보증금제를 활용하고 하는데, 기금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좀 있습니까?

전에 문화진흥기금이 폐지되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신재민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은 일반적으로 직접 지원은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콘텐츠산업이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부 지원이 자칫 독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 인프라를 개선해 준다든가 아니면 제도를 개선해 준다든가 하는 쪽에 좀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대체로 영세하고 또 담보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중기청에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또 콘텐츠진흥기금 이런 것은 새로 생각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신재민 지금 기존에 기금 유사한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정부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 방통기금 같은 걸 지금 어느 정도나 콘텐츠에 사용할

지 이런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나면 부족한 부분만큼은……

○윤석용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최악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가지고 이걸 담보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신재민 알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지금 완성보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규모도 적고 지원할 데는 너무 많고 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을 개척할 때는 금융지원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영화 외에는 다른 데 수출보험을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신재민 아직은 제도 상으로는 열려 있지만 실제 수익성이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런데 이런 데 R&D 투자를 좀 많이 해 주고 해서 영화뿐만 아니라 마케팅, 특히 또 컨설팅 제공, 수출펀드 제공 이런 것을 조성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야 살 수 있지 영화만 자꾸 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송, 영화 이런 데 주로 중소기업종만 R&D 지원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공연 이런 산업에도 좀 해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신재민 지금 현재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 거대한 펀드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보다는 펀드를 통해서 시장원리도 작동을 하면서 또 공공적인 뒷받침도 될 수 있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지금 문화콘텐츠 사업은 사실 인력 유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심각하게 짜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방통위 위원장한테도 말했지만 장애인들도 이런 사업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이 배려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환경부차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문광부의 자료에 보면요, 상수원보호구역에 골프장을 확충해서 고용창출을 유도하겠다고 그런데 환경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차관 문정호** 일반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방법이 투자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까마는 규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최영희 위원** 아니, 상수원보호구역에 골프장이 들어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환경부차관 문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지역 개념은 아마 잘못 적용한 사례 같은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최영희 위원** 반대하시는 겁니까, 그럼?

○**환경부차관 문정호** 예, 전적으로 절대 그런 행위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현재 돼 있고……

○**최영희 위원** 문광부차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신재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몇 키로까지는 무엇이 금지돼 있고 몇 키로까지는 무엇이 금지돼 있고, 현재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상수원 금지구역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의 개념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를 조금 완화하자는 취지이지 그 안에 상수원을 해치겠다거나 이런 정도의 접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지금 현재 입지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때 상수원보호구역을 규제한 이유가 있을 텐데 무슨 조건이 달라져서 지금은 몇 키로 이후에는 골프장이 들어갈 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신재민** 그 뒤로 우선 감독이 철저히 됐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 진보도 있습니다. 아무리 골프장에 잔디를 키우는…… 그리고 실제로 이 회원제골프 이전에 대중골프장의 경우에 먼저 이미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경우에도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상수원보호구역……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정부 부처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골프장들이 다 돈 벌고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차관 문정호** 이것을 제가 좀 보완해서 환경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그 지역이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일정거리에 저희가 그동안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오염총량제를 적용해서 오염물질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거리를 부분적으로 좀 줄여 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인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현재보다 절대로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달성이 될 때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은 지속적인 관찰과 감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환경부차관 문정호**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후적으로 관리·감독 이 부분은 계속 되고요.

○**최영희 위원** 어쨌든 규제 완화라는 것을 이 정부 들어서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환경부나 이런 데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규제를 했던 건데 여기마저도 풀어서 골프장을 만 들어서, 지금 현재 골프장들이 영업이 안 되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택시가 너무 과잉이기 때문에 같이 망하는 것처럼 수도권 있는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자리 창출로 해서 만들어 놓는 이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철저히 논의를 해서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차관 문정호** 예.

○**최영희 위원**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창출에서 게임콘텐츠산업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그런데 지금 독성도 많지요.

게임 문제가 지금 아이들이나 요즘에는 어른들, 부부가 아이를 방치해 놔서 죽게 만드는 이런 문제점들도 생기고 있는데 이제는 문광부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 육성만이 아니라 함께 네거티브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게임산업들에게 기금을 분담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치료나 예방에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회적 일

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신재민 그런 방안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심각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정의 평화가 파괴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아이들의 게임중독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광부가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유치원에 예술강사를 파견한다고 했는데 이와 비슷한 보육시설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 할 것인가, 파견하지 않고 어떤 차별을 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베네수엘라에서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빈민촌 아이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가르쳐 가지고 아이들을 굉장히 좋은 그런…… 한 삼십몇 만 명을 클래식 악기를 가르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왔고 이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신재민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소외된 청소년들도, 지금 현재 악기나 이런 것들을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아카데미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예술인들을 파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신재민 말씀하신 대로 예술강사사업은 처음 시작한 학교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지역을 중심으로도 못지않게 합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외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더 확대해서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좀 확대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솔직히 정부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빨리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

아이들한테 가장……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소외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직접 몰려 있는 곳들이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모여서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이들을 보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신재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위원 강석호 위원입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하나 여쭙볼게요.

아까 말씀, 질의 답변 과정에 제도 변화로 인한, 새로운 미디어법 개정으로 인한 케이블 통신 분야, 물론 직능 분야별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했는데 총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니까, 늘어납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경자 아시다시피 그……

○강석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중의 하나만 답변하세요.

총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아직 모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경자 제도 변화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강석호 위원 아니, 애초에 계획된 부분에서 미디어법을 개정을 했잖아요. 그걸로 인한다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경자 늘어날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로, 어느 시점에서, 어느 분야에서 늘어날 건지 줄어들 건지 하는 것은 아직 제도 개선으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너무……

○강석호 위원 아니, 그건 어떤 정책이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출발을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늘어난다고 출발을 했어요, 줄어들 거라고 출발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경자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강석호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건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지적을 합니다.

문광부의 차관님 나오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신재민 예.

○강석호 위원 차관님, 현재 보니까 관광산업이 참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아이디어만 많으면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 2012년도까지 ‘한국방문의 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신재민 그렇습니다.

○강석호 위원 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신재민 예.

○강석호 위원 그래서 이 관광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세계 각국도 보면 환경, 정보통신, 관광산업이 21세기 3대 주요산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많이 집중투자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관광산업에 1억을 투자하면 6명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또 외래관광객 1명을 유치하면 21인치 컬러TV 9.4대를 수출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읽어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신재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이지요, 우리가 경제 문제나 여러 가지로 해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자는 감소가 됐지만 또 들어오는 부분도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준비 없는 관광객 유치하는 부작용만 생긴다, 이 관광산업 전 분야에 대해서 고질병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국인, 특히 이제는 우리가 5일제 근무니까 내국인의 지방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국내관광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신재민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은 주로 외국인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나라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이미 일본하고 우리는 외래관광객 수는 비슷해졌습니다. 관광인프라에서는 너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관광의 내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관광의 내수진작이 외래관광객 유치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 아래 지금 다양한…… 우선 공무원부터 휴가를 실시한다든

가 또 휴가를 분산한다든가 또 지금 의회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휴일제 같은 것도 저희 문화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예.

차관님, 최근에 일본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신재민 그렇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경상북도 자료를 보니까 매년 이렇게 독도 입도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4만 1000명인데 2009년 작년도에는 13만 5000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도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독도관광 활성화 대책안도 발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신재민 하여튼 현재로는 없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알겠습니다.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일자리 시스템 ‘일모아’ 관련해서 환경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방통위도 이렇게 보니까 말이지요.

방통위 부위원장님, 아까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으셨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경자 무슨 말씀 하셨는지……

○강석호 위원 위원장님 아까 할 때 안 계셨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경자 예, 못 들었습니다.

○강석호 위원 못 들었습니까? 나중에 그거 한번 들어 보시고.

방통위도 보면 제로입니다, 제로. 일자리 부처별 정보를 올린 사이트에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니까 돌아가서 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왜 이렇게 제로인지 저한테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위원장대리 정희수 보충질의 마지막입니다.

○김광림 위원 보충질의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제가 하면 마칩니까?

○위원장대리 정희수 예.

○김광림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권혁세 부위원장님!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김광림 위원 두 가지만 기록도 남기고, 지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사무실에 와서 협의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김광림 위원 아까 미소금융 쪽인데요. 그러니까 재산이 1억 3000만 원이고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인 사람이 은행에 연체가 많아 가지고 신용등급이 8등급이면 이 사람은 미소금융 지원 대상입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김광림 위원 그런데 재산이 이 사람보다 훨씬 적은 8000만 원이고 한 달 수입도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은행에 가 본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김광림 위원 그래서 원래 미소금융 그 자체가 지원상품 기준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만 소득기준을 한번 넣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게 하나이고……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김광림 위원 그게 하나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장에서 일수 쓰는 할머니는 운영자금, 직장에서 금방 나와 가지고 뭐 좀 해 보려고 리어카라도 사겠다는 사람들은 창업자금,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은행에 가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은행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미소금융 대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데, 새로운 미소금융 지점을 낼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료를 지원하고 또 공공청사의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시스템을 좀 이렇게 지정할 때…… 지금 경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김광림 위원 경쟁이 치열하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김광림 위원 유치하려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김광림 위원 할 때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자신 있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시고, 좀 협의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소득기준 그다음에 은행실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지금 현재 기준을 아직은 저희가 완화할 그런 생각은 없고요. 다만 조금 더 실적추이를 봐 가면서 지금 현재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적추이를 좀더 저희는 지켜보자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있고요. 그래서 실태를 좀더 파악한 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소득은 실적을 한번 보고 해야 되고, 그것 말고 별로 은행 이용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그냥 일수 쓰면서 이렇게 착실하게 돈 안 떼어먹고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원대상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마는…… 등급이 없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미소금융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림 위원 아, 그것 최근에 한 겁니까?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홍영만 예.

○김광림 위원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홍영만 예,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요. 오늘 그……

○김광림 위원 예, 소속하고 직위, 성명 말씀해 보세요.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홍영만 예,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홍영만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비상경제대책 회의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그 이사회가 열리는데요. 거기서부터 그것을 내부 기준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걸 반영을 해서 무등급자이더라도 나머지 조건들을 다 충족을 하면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광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마 그게 상식적인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홍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것은 좀 확실히 챙겨 가지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김광림 위원 지점 유치할 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인센티브를 선발할 때, 선정할 때……

○김광림 위원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가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김광림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 했더니만 추가질의자가 한 분……

윤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분 정도.

○윤석용 위원 차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거기도 장애인 고용이 좀 잘 안 됐으니까 그걸 빨리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법무부차관 황희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황희철 지금 한 55만 정도 들어와……

○윤석용 위원 55만?

○법무부차관 황희철 예.

○윤석용 위원 그중에 한 9%가 불법 체류자로 돼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황희철 예.

○윤석용 위원 그런데 불법 체류자가 대부분 단순노동자,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황희철 예.

○윤석용 위원 그런데 고용허가제로 지금 얼마간 한국에 체류해야 이게 됩니까?

○법무부차관 황희철 보통 이제 3년을 하고……

○윤석용 위원 3년 동안 그러면 직장을 몇 번 바꿀 수 있습니까? 3번 바꿀 수 있지요?

○법무부차관 황희철 뭐 그렇게 되지 않나……

○윤석용 위원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3번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잘못하면 다 불법 체류자가 돼 버립니다. 우리가 저출산문제, 인력은 줄고 중소기업·3D기업에는 아무도 안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완화해야 안 되겠습니까?

중소기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일을 못하고, 단속기간이면 전부 다 어디 숨어버리니까 진짜 산업이 마비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대책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황희철 지금도 이제 신청을 1개월 내에 하면 3개월까지는 유예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직장을 바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해서……

○윤석용 위원 그런데 외국인이 와 가지고 언어도 거의 안 통하고 두 달 만에 이걸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도 없고, 이러다 또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실 불법 체류자가 다 돼 버립니다.

이분들한테는 좀 이민정책이나 국적정책을 내가 전번 대정부질문에서 바꾸라고 했었습니다라는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정말로 이분들한테, 일정 기간 한국에 체류한 사람 같으면 국가 검정고시 같은 걸 한번 쳐 가지고 거기에 통과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좀 대우를 해 주고 한국에서 머물러 우리 국가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좀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법무부차관 황희철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심층적이 아니라 당장 이분들이 없으면 중소기업이 안 돌아갑니다.

○법무부차관 황희철 예.

○윤석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국가 차원에서 인력수급정책으로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 좀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차관 황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리고 프랑스에도 선택적 이민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곧 받아줘야 되는 입장이니깐 법무부에서는 좀 전진적으로 정책을 펴고 이렇게, 해외 우수 인력도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왜 해외의 여자들, 사실 학력 낮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자들만 결혼시키지 말고 진짜 우수 인력들이
와 가지고 한국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좀 만들
어 주셔야 됩니다.

○**법무부차관 황희철**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
희가 이미……

○**윤석용 위원** 그렇습니다.

○**법무부차관 황희철** 저희가 지금 국적법을 제
출해서 법사위 1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리하세요. 법무부가 속도가 좀
늦습니다.

○**법무부차관 황희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정희수** 한 가지만요? 추가질의요?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희수** 최영희 위원께서 진짜 마
지막으로 3분 이내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최영희 위원** 저 없는 사이에 누가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미소금융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용 위원** 다 했어요.

○**최영희 위원** 다 했어요? 그래도 한번 해 보겠
습니다.

이 미소금융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활이 목표
인데 이 사업의 핵심이 상담과 관리기능 아닙니
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
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지금 저희들이 아
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컨설팅…… 창업을 하
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컨설팅하고 사후관
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마이크로크레딧 사업하시는 분
들도 상당히 노하우가 계시고 또 저희들이 이것
을 사업을 하면서 특별히, 지금 실적이 초기에
약간 부진한 것도 이게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컨설팅이나 사후관리, 현장실
사 이런 걸 철저히 하고 대출하자 이렇게 해서,
실적이 좀 다소 더디게 느껴지는 게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마이크로크레딧이 회수율이 83%
나 되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노하우가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결국은 상담하고 관리하는 인력이 있었기 때문이
거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미소금융
은 전담 상담사가 없이 6개월 동안 매달 1회 방
문해서 상담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제가 생각
하기는 마이크로크레딧을 확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방향을 바
꿀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것들
을 위해서는 전담 상담사나 창업전문가 이런 것
들을 좀 확충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
게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
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미소재단 내에서 자체
교육원도 만드는 데도 있고요. 또 중앙재단에서
종합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원도 설
치를 하고 있고 또 전문가 풀(pool)들을 많이 확
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최영희 위원** 그것도 일자리 창출과 연결이 되
는 것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것 추가…… 자리에 앉았으면 했을 텐
데 아까, 문광부하고 환경부 쪽에 서면질의로 하
겠습니다.

저희 특위가 죽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뭐냐? 성의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이
웃이 지금 막 일자리를 잃기 직전이라면 여러분
들 어떻게 하시겠는가? 아이디어가 좀 많이 취약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특위가 마무리되
면 종합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해서 그렇게 할 겁
니다.

필요한 것은 늘 서면으로 해서, 여기에는 여야

가 따로 없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갖고 특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드시는 주역들 아니겠습니까? 본인 일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상으로 법무부 등 3개 부처와 3개 위원회에 대한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위원님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기하신 문제점 및 정책대안을 심도 있게 수렴하셔서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고용률 제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준선 위원, 김성식 위원, 정희수 위원님은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고 이 서면질의 답변은 우리 특위 제4차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희철 법무부차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문정호 환경부차관, 이경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오늘 나와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4월 27일 화요일에는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등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현장 시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우리 특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강석호	김광림	김성식	김용구
김재균	박준선	배은희	변재일
윤석용	정희수	최영희	홍영표
홍희덕			

○출장 위원(1인)

성윤환

○청가 위원(1인)

안효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국	경	북
전문위원	김	광	목
○정부측 참석자			
법무부			
장 차	관	이	귀
기획조정실장	관	황	희
범죄예방정책국장		최	재
교정본부장		주	철
문화체육관광부		이	태
장 차	관	유	인
제1차관		신	재
기획조정실장		곽	영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유	병
정책기획관		이	우
문화예술국장		박	광
예술정책관		박	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방	선
체육국장		김	기
미디어정책국장		김	갑
환경부			
장 차	관	이	만
기획조정실장	관	문	정
물환경정책국장		홍	준
자연보전국장		김	지
자원순환국장		정	연
기후대기정책관		백	규
상하수도정책관		윤	종
녹색환경정책관		안	문
환경보건정책관		이	정
기상산업정보화국장		오	종
직무대리		이	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	시
부위원장		이	경
기획조정실장		이	기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서	병
방송정책국장		김	준
통신정책국장		신	용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	호
부위원장		손	인
사무처장		박	상
기획조정관		김	순

경쟁정책국장	지	철	호
시장감시국장	안	영	호
기업협력국장	김	상	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	혁	세
사무처장	김	주	현
기획조정관	정	지	원
금융정책국장	추	경	호
금융서비스국장	홍	영	만